"전남 농어촌서 제2의 인생 시작할래요"

지난해 귀농 1869가구 … 경북이어 전국서 두번째 높아

귀어 343가구 최다 … 어촌관광 소득창출 늘어 꾸준히 증가

농축산부·통계청 조사

은퇴 후 번잡한 도시를 떠나 농·어촌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는 베이비붐 세대가 증가하면서 전남에도 귀농·귀어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3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통계청이 공동 발표한 '2015년 귀농·귀촌·귀어가구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귀농가구는 1869세대, 귀어가구는 343가구로 전년대비 평균 10% 이상 증가했다.

귀농인은 한 지역에 1년 이상 살던 사람이 농촌지역(읍·면)으로 옮겨 농업경영체 등록명부나 농지원부, 축산업등록명부에 등록된 이를 의미한다.

지난해 전남지역 귀농인 수는 전국에서 경북(2221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연령별로는 50대가 71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40대(429명)·60대(421명)·30대(225명) 순이었다. 귀농인 가구구성 형태를 보면 독립가구가 1610가구로 혼합가구(귀농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구를 구성한 경우) 259가구 보다 많았다.

재배작목별 현황을 보면 채소가 433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과수(355가구)·논벼(345가구)·특용(234가구)·두류(202가구) 등의 순이었다. 재배면적은 0.5ha 미만(769가구)·0.5~1.0ha 미만(175가구)·1.0~2.0ha 미만(71가구)··2ha 이상(26가구) 등이다.

귀어 세대는 전남이 343가구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340가구)·경남(91가구)이 그 뒤를 이었다. 가구 현황별로는 1인 가구가 243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2인(63가구)·3인(22가구)·4인 이상(15가구)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90명)·30대(81명)·60대(43명)·70대(23명) 등이었다. 귀어인 수는 모두 358명으로 이중 89명은 겸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중 시군 외(광역시도간 포함) 이동 귀어인 수는 335명이었으며 시군에서 이동한 수는 23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아직 귀농만큼 규모가 많진 않지만 어업 소득이 계속 오르는 추세이고 해양레저나 어촌관광·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득창출이 가능해 귀어인구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지난해 어가 소득은 평균 4390만원으로, 도시 근로자 가구의 76% 수준이었다.

한편, 귀농·귀어인을 제외하고 전원생활을 하는 귀촌가구의 수는 31만7409가구로, 전년 대비 6% 증가했다. 귀촌인의 평균 연령은 40.3세로 전년 대비 0.2세 낮아졌고, 20대와 30대의 비율이 각각 26.5%, 24.8%로 가장 많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저성장에 따라 고용이 불안해지고 젊은 층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바뀌면서 40대 이하 귀촌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전남도, 전국 최초 드론 활용 지적재조사

측량 정밀성 높여 토지 경계 다툼 해소 도움

전남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무인항공기(드론)를 이용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했다.

지난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18개 시·군 24개 지구에 대해 드론으로 항공촬영을 한 뒤 촬영된 고해상도 정사영상을 주민설명 자료 등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종이도면 출력 또는 현장 설명만으론 변결될 토지경계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많았었다.

전남도는 드론으로 촬영한 고해상도 정사영상의 경우 현재 토지경계와 변경될 토지경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재조사 측량불신과 토지 소유자간 경계 다툼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해당 시·군에 촬영된 영상을 배부했으며, 각 시·군에선 항공촬영 영상 자료를 활용해 민원인들의 설명자료로 이용하고 있다.

박종석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올해 추진했던 드론 촬영 기술을 더욱 보강해 내년부턴 재조사 사업지구 선정부터 사업 완료 때까지 드론을 활용해 보다 정밀한 지적재조사사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드론을 구입한 뒤 각 시·군의 각종 개발사업 및 축제 등 156곳의 촬영신청을 받았다. 이중 35곳을 촬영해 해당 시군에 관련 영상을 제공하는 등 국내 드론산업의 선두주자답게 각종 업무에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순천시 17억 자재구매 '부적정' 수의계약

전남도 감사 "1억3700만원 낭비"

순천시가 침수 예방사업 과정에서 17억원가량의 자재를 사들이면서 특정 업체와 '부적정'하게 수의계약한 것으로 전남도 감사 결과 확인됐다.

지난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는 지난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 사업'을 한다며 조립식 암거불록 17종을 구매하기로 하고, 21억원어치(7종)는 경쟁입찰로 A 업체를 통해 사들였고, 16억8000여만원어치(10종)는 B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등을 지키지 않고 분할구매와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1억30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전남도는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는 17종 모두 일괄 경쟁입찰로 구매했어야 했다"며 "분할구매와 수의계약을 하는 바람에 1억37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말했다.

도는 "맑은물관리센터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가 사회문제가 되자 해지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했고, 위법한 계약행위가 언론을 통해 전국적으로 보도되어 물의를 일으키는 등 행정기관의 공신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 안팎에서는 분할구매, 수의계약 과정에서 금품 등 불법적인 행위가 이뤄졌을 개연성이 있는 만큼 검찰과 경찰에 수사의뢰 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수의계약 업체와 담당 공무원들 간 모종의 거래가 의심됐지만 물증을 찾지 못했다"며 "공무원 1명은 경징계, 공무원 2명은 훈계토록 순천시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목포·순천·여수·광양 직행우등버스 오늘부터 운행

7월 1일부터 광주~목포를 비롯한 5개 노선에 28인승 우등버스를 투입하는 시외직행 우등버스 제도가 시행된다.

광주~목포 1일 15회, 광주~순천 10회, 광주~여수 11회, 광주~광양 5회, 목포~부산사상 2회 운행된다. 요금은 일반버스 요금 대비 1.3배(30% 할증) 인상된다.

탑승일 이틀 전까지 표를 왕복 예매하거나 5인 이상 10인 이하 단체(성인) 예매하고, 시외직행우등버스의 가장 뒷좌석을 예매하면 10%의 할인혜택을 받는다.

전남도 남창규 도로교통과장은 "그동안 광주-목포 등 시외버스는 서울이나 부산을 가는 고속버스보다는 비교적 짧은 구간을 운행하기는 하지만 옆자리 동승객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꺼리는 이용객이나 비좁은 좌석에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시외우등버스 도입으로 이용객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대중교통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조선대생들 국토대장정 출발 국토대장정에 나선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30일 오전 광주 동구 서석동 본관 앞에서 성공적인 완주를 다짐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이들은 이날 완도항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에 도착, 제주도를 일주한 뒤 목포항을 거쳐 광주로 다시 돌아오는 13일간 일정으로 강행군을 벌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의회 상임위 배정 진통 끝 통과

일부 도의원 반말·고성 반발

제10대 후반기 전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안이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진통 끝에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신임 도의회 의장과 일부 도의원들 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놓고 반말과 고성을 주고받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307회 임시회에서 전체의원 58명 중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반기 상임위원 선임안이 최종 통과됐다. 본회의 최종 표결 결과는 찬성 34명·반대 6명·기권 9명 등이다.

해당 안건을 놓고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는 기싸움이 시작된 지 5시간 만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도의원들은 후반기 상임위원 배정에 관여한 신임 의장을 찾아가 "상임위를 바꿔달라"며 언성을 높이며 반말을 주고받는 등 추태를 보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20여명(대표 문행주·대변인 우승희 의원)은 이날 상임위원 배정 과정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조치로, 이날 도의회에 원내교섭단체를 신청했다. 교섭단체 구성 후 현재 유리한 고지를 점한 국민의당과 동일선상에서 상임위원 배정을 놓고 협상을 벌이겠다는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의석 수는 더민주 33명·국민의당 22명·무소속 2명·새누리당 1명 등 총 58명이다.

이 같이 전반기 막판에 도의원들이 상임위원 배정에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인 것은 2년 후 지방선거와 직결되기 때문. 현재 도의원들이 선호하는 상임위로는 교육위·농수산위·건설소방위를 꼽을 수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시 2020년까지 음식물쓰레기 30% 줄인다

시설견학 등 범시민운동

광주시가 2020년까지 음식물 쓰레기 30% 줄이기에 나섰다.

광주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계획을 세워 올해 5%, 2018년 15%, 2020년 30%까지 연차적인 감축을 추진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계획은 '알리기', '느끼기', '실천하기', '확산하기' 등 4단계로 구분됐다.

시는 언론, 시민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범시민운동을 펼쳐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하는 필요성을 알리고 음식물 처리시설 현장견학과 환경교육으로 문제점을 느끼도록 하기로 했다.

탈수통 보급 등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실천하도록 하고 30% 줄이기 인증제 등을 통해 실적이 우수한 기관, 단체, 공동주택을 지원해 확산할 방침이다.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020년까지 음식물 쓰레기 15만1000여t이 줄어들어 222억원의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온실가스도 소나무 8천만여 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은 22만4000t이 감축된다.

시 관계자는 "광주는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전국 최고"라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